

# 與 국회서 광주·전남 통합 공청회… “갈등 조정하고 단결”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전남도가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과 공론화를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전남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특위 공동위원장 겸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 을) 의원은 “행정 통합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인구 유출에 의한 지역 소멸,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한 생존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나 대의를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서로 양보해야 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조는 선(先) 통합이다.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은 차차 조정하고, 좋은 안이 나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위원장 겸 전남도당위원장인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수단이 통합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각자 조건이 달라서 해법이 다른 문제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통 큰 단결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당부했다.

발제에 나선 ‘예산·재정통’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을)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일일이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별시를 설치해 국가 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자율적 조직 구성과 파격적 재정특례로 권한과 재정, 조직을 결합한 실질적 자치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산업, 인력, 공간, R&D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갖춘 광역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간 빠른 추진을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님과 함께 움직였다”며 “이제부터는 촘촘하고 꼼꼼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

민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특위, 15일 광주시·전남도 등과 공청회 “통합은 생존전략, 대의 위해 양보를”, “지자체간 권한 충돌 우려”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공청회'를 마치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제공

해 백가쟁명의 논쟁을 이어가되 '부강한 광주·전남'을 열어 달라는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정부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역시 그 방향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되, 앞으로 진행될 시·군 공청회를 통해 주민 목소리를 더욱 깊이 듣고 사회적 공감 속에서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민빛 청사진과 함께 “속도전과 공론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선거 전후로 로드맵을 구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 구상과 농산어촌 배려책은 긍정적이나 광역과 기초, 시·군·구 권한 재편 방안이 필요하다” “특례는 현실적 재정 검증이 필요하다” “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뉴스시스

# 정부, 행정통합 지자체에 ‘연5조·서울시급 위상’ 지원… “파격적인 4대 인센티브 제공”

재정·위상·공공기관·산업활성화 지원… “행정통합, 국가발전 필수전략”

행정통합 시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4년간 최대 20조 재정 지원

정부는 16일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정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 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

화 등에 투입된다. 통합 특별시의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 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은 우대받게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되며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 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됐다.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

참여를 희망하시는 도민분들께서는 상단의 QR코드 스캔 후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일차       | 시간    | 시·군 | 장소         |
|----------|-------|-----|------------|
| 1.19.(월) | 10:00 | 영암군 | 영암군청소년센터   |
| 1.20.(화) | 10:00 | 장성군 | 장성문화예술회관   |
| 1.21.(수) | 14:00 | 산안군 | 산안군청 공연장   |
|          | 16:30 | 목포시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
| 1.23.(금) | 15:00 | 광주군 | 광동문화예술회관   |

※22개 시·군 순회 /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의견 수렴

19일 영암군 시작으로 도민공청회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영암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을 돌며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전남도 시군교육청, 전남연구원, 공동 주최하며, 각 시군 문화예술회관이나 대강당 등 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중집합 장소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기관·사회단체, 읍면동장과 군 공무원 등 행정통합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도민 공청회 홍보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한다.

공청회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주요 특례 등을 도민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열리는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의 수용성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께도 행정통합 추진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전남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도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통합 논의 과정과 향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군 지역·농어촌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시도민을 대표하는 각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를 운영을 통해 속의·공론장을 만들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 연계를 통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이 40년 행정 경계를 허물고 대부분을 이끌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와 호남 발전에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최고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번 도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도민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